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는

-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 -

2014. 9. 24.



<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에게 드리는 글 >

- 금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더 없는 슬픔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 모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사실 바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공간입니다.
 - 해양수산부 본연의 임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창조경제의 보고(寶庫)인 바다에서 경제 활력의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 지금 정부는 장기 저성장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 부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과감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
- 본 보고서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 이번 방안에는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여 해양수산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 앞으로 관제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계획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목 차



I . 해양수산 부문 현황	1
1. 현 상황 진단	1
2. 전 망	3
II . 주요 실천과제	5
1. 내수 활성화 : 민간투자 촉진	6
가.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6
나. 다목적 항만 인프라 투자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6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9
다. 과감한 규제완화 등 수산업 투자환경 개선	10
2. 민생 안정 : 국민 불편·불만 해소	12
가. 해상교통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12
나. 도서민의 생활 안정 지원	13
다. 수산업 종사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유통환경 조성	14
3. 경제 혁신 : 성장 모멘텀 창출	15
가. 해양관광 서비스산업 육성	15
나. 기업활동 편의를 위한 손톱 밀 가시 제거	16
다. 창조경제 성공모델 실현	17
라. 해외진출 활성화	19
III . 성과 점검·관리 방안	21
IV . 과제별 추진 일정 (Action Plan)	22
[별첨] 경제활성화 관련 소관법령 정비계획	25

I. 해양수산 부문 현황

1 현 상황 진단

① 해양수산 부문의 국내 경제비중은 GDP의 약 6.3%로 답보 추세

□ 그간 해양수산업은 해운·항만, 수산, 조선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에 기여

* 연평균 생산 증가율('90~'07) : 해양수산업 12.2% vs. 전체 산업 10.8%
수출 증가율('90~'07) : 해양수산업 15.2% vs. 전체 산업 12.8%

□ 우리 경제에서 해양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6.3%*(11)이나, 해양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에 비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

* GDP 약 1,214조원 중 76조원(직접 40, 간접 36) / 중국('13) : GDP의 9.5%, 54,313억위안

②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 소수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서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주력 산업 침체 시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

* 해운·수산·조선이 전체 해양수산업의 3/4 이상, 77.5% 차지('11, 산출액 기준)

○ (해운) 장기 호황 시('04~'08) 발주한 선박의 인도와 초대형선 증가 등으로 '09년 이후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 지속

- 금융위기 이후 선박 대형화 등으로 시장 운임 변동폭이 매우 커지면서 선사들은 수익성 확보와 안정적 경영에 애로

○ (수산) '08년 이후 생산은 정체 중이며, 가공품 생산액은 8.5조원('13)으로 성장세이나 저부가 단순 냉동품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

③ 첨단 기술기반의 신산업은 초기 단계, 과감한 투자 필요

-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은 국가 R&D 투자를 지속 확대 중
 - * 주요국의 해양수산 R&D 투자 추이 : (美) 3.1조원('04) → 11.4조원('10), (中) 0.4조원('04) → 2.4조원('10), (日) 0.9조원('04) → 2.5조원('10)
 - 선진국과 비교하여 투자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고, 7대 세계 선도기술 확보(해수 중 리튬 추출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준(13. 57%)도 낮은 편
 - * R&D 비중(해양/국가) : 미국 7.3%, 일본 5.0%, 중국 7.0%('10), 한국 3.1%('14)
- 원천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까지 연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측면의 정책적 관심 제고 필요

④ 유망 서비스산업인 해양관광은 인프라 확충, 안전 문제 선결 필요

- 요·보트, 크루즈 등 해양관광·레저에 대한 관심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증가
 - * 해양관광 수요 연평균 9% 증가 전망(KMI) : ('08) 139백만명 → ('14) 218
- 관광자원의 계절(7~8월)·지역적 편중 문제,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요 다변화를 위한 관광상품과 고부가 콘텐츠 개발이 미흡
 - * 휴가철(7.25~8.10) 연안여객 이용객 : ('13) 1,539천명 → ('14) 855 △44% 감소

⑤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독자적인 정책·산업 영역 구축에 한계

- 해양수산업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관련 예산 확보에 애로
 - 해양영토 수호, 먹거리, 불법조업 단속 등의 분야 외에는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노력 부족
 -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2 전 망

□ **(해양)** 전 세계적으로 해양 에너지·광물·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현재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미래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신산업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10~'20, 매출액 기준)은 20.5%로, 전통산업(해운, 항만, 수산 등)의 연평균 증가율(4.5%) 보다 약 5배 높을 것으로 전망('11, KMI)

○ 신산업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전통산업(해운·수산 등)에 편중된 국내 해양산업의 구조는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

* 해운, 수산 등의 비중(총산출액 기준) : ('08) 79.6% → ('20) 69.7% 예상

□ **(수산)** 생산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소비 패턴에 대응하는 유통·시장구조 재편과 어촌 복지의 중요성 증대

○ (생산) 잡는어업은 현 수준 유지, 양식어업은 지속 증가

* <어로> ('14) 1,047천톤→('15) 1,060→('17) 1,060 <양식> ('14) 1,563천톤→('15) 1,606→('17) 1,693
<원양> ('14) 533천톤→('15) 533→('17) 537 <내수만> ('14) 25천톤→('15) 30→('17) 32

○ (소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는 대형마트, 윗집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

* 대형마트 약 7%, 윗집 9%, 전통시장 5%, 도매시장 2.5%('14.7, 전년 동월비)

- 장기적으로는 1, 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원물 형태의 소비는 감소하고,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격)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가격**과 공조하여 지속 상승

* '14.6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4(전월대비 △0.2% / 전년 동월대비 1.3%↑)

** '20년 가격 전망(FAO) : 어로수산물 23% ↑, 양식수산물 50% ↑

○ (어촌) 낙후된 복지 여건 등으로 신규 인력과 자본의 진입이 어려워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와 영세성 지속 전망

* 인구(65세 이상) : ('03) 212천명(15.9%) → ('13) 147(29.9) → ('20) 112(50.2)

□ (해운) '14년 하반기부터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다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선대 개편 등으로 불확실성 증가

○ 중국의 경기 부양, 미국의 소비 회복세 등에 따른 실물 경제 회복으로 '14년말을 기점으로 해운시황도 느린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건화물시장) 중국의 철광석 물동량 증가 등을 상승 동력으로 '17년까지 침체기 이전 수준(BDI 1,500~2,000p)을 회복

* Drewry 전망(BDI, p) : ('14) 1,258 → ('15) 1,327 → ('16) 1,415

RS Platou 전망(BDI, p) : ('14) 1,545 → ('15) 1,903 → ('16) 1,931

- ('컨' 시장)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에 따라 운임 상승이 예상되나, 선박대형화 경쟁 등으로 초대형 선사로의 수익 집중화 우려

* RS Platou 전망(평균 운임, \$/TEU) : ('14) 1,170 → ('15) 1,200 → ('16) 1,230

○ 그러나, 선박 발주 증가*와 세계 1~2위 대형 컨테이너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등이 시황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세계 30대 선사의 선박 발주량('14.5 기준) : 3백만TEU, 276척

** 하반기 출범 예정이었던 P3 network는 중국 정부의 승인 거부('14.6)로 무산되었으나, 2M(Maersk, MSC) 출범('14.7) 등 얼라이언스를 통한 선박 공유는 확대 예상

□ (항만) 전반적인 SOC 투자 감소 추세 속에서 전통적인 항만 기능 외에 복합·다기능화와 재생을 통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 전망

○ 총물동량은 '13년 13.5억톤 → '20년 17.6억톤으로 연평균 3.7% 증가

* 컨테이너는 '13년 2.3천만TEU → '20년 3.1천만TEU로 연평균 4.2% 증가

- '컨'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Ningbo-Zhoushan항이 부산항을 추월('13. 5위 → '14. 6위)하는 등 중국 항만과의 '컨' 물동량 경쟁에서 어려움 예상

* 순위/만TEU('14.上): ①상하이(1,724, 5.5%↑), ②싱가폴(1,651, 4.4%↑), ③홍콩(1,111 3.5%↑), ④선전(1,096만, 0.6%↓), ⑤닝보-저우산(962, 13.1%↑), ⑥부산(912, 3.5%↑)

○ 본격적인 항만재생과 함께 민자 유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을 해양 기반의 다목적 경제활동 공간으로 발전 전망

II. 주요 실천과제

현 상황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와 외부 자본 유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통산업은 정체, 신산업은 태동 단계 ◆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 시급
--------------------	--

정책 기조 및 방향	
<내수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투자처 발굴 등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 재정투자 확대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인프라 분야 1.2조원 투자('17) → 20조원 유치 •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해양공간 이용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투자 허용,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민생 안정> 국민 불편·불만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서비스 안전·품질 제고 • 선박 기항시설 등 도서 지역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도서 국가관리 강화 및 무인도서 이용 촉진 • 생산자-소비자가 win-win하는 유통환경 조성
<경제 혁신> 성장모멘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 서비스산업 육성 • 기업활동 편의를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 • 창조경제 성공모델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현대화, 수산식품 가공산업, 극지 기술 등 • 해외진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수출 30억불 조기 달성, 항만·해운 물류 기업 진출 확대,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

1 내수 활성화 : 민간투자 촉진

가.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① 해양수산 분야 유망 투자처 발굴 및 투자 확대 지원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14.8)에 따라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망 사업 육성 및 투자 유치방안 수립·추진('14.12)

*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15년 발생하는 기업소득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 투자유치 TF('14.8.19~)를 중심으로 국내외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중점 검토

* 해양심층수, 해양헬스케어, 여수박람회장 활용, 크루즈·마리나, 해양바이오, 선박평형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산기자재 등

- 특히, 한·중 FTA 등을 계기로 수산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적합한 사업 발굴도 병행
- 민간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14.9)와 사업별 타겟 마케팅('14.10~)을 실시하고, 적극 투자자 연결과 기술 이전협상 등 지원(KIMST)

나. 다목적 항만 인프라 투자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①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 (재정투자)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민간의 대규모 지역투자 촉진

- '17년까지 광양항 묘도(337억원), 동해항(1,530억원) 등에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실현

《 지역별 투자 사업 》

구 분	투자장애 해소	재원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대안 입지 조속 확정('14.12) ○유류중계기지 부지 확장 등 방안 마련('14.10)	1.1조원(民0.7, 財0.4) 民3,119억원
고현항('14~'20)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실시계획 승인('14.12)	民2.1조원
광양항 묘도('16~'29)	○협상 완료('14.12), 기반시설 지원('15.下 착수)	48조원(民4.7, 財5백억원)
동해항	○자원수송 전용 항만 기반시설 지원('15.上 방파제)	1.7조원(民0.8, 財0.9)
하동항	○해양플랜트 유치 기반시설 지원('15. 설계)	1.7조원(民1.5, 財0.2)

- (제도 개선) 재정 지원기준 마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민간투자 장애 해소

* 예) (국가) 도로, 철도, (지자체) 공원 등 문화시설, (국가+지자체) 용수, 통신, 에너지 등

** (現) 전략환경영향평가 2회(기본계획, 사업계획) ⇒ (改) 1회(기본계획)

- 특히, 부산북항, 영종 드림아일랜드 등 핵심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유망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안전투자) 대형 선박의 입출항 장애물* 제거, 내구연한(40년)에 이른 낙포부두 개축('15, 예타) 등** 선도적 투자로 신규투자(진단·보수) 유발

* 부산항 신항 토도(4,600억원, '15~) 및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2,900억원, '15~)

** 침수방지 시설(1.2조원), 방파제(1.4조원) 및 내진성능 보강(0.2조원) 실시(~'20)

② 항만배후단지를 복합물류 비즈니스벨리로 조성

- (투자장벽 해소) 물류업체용 최소 부지 외에는 개발 방식을 현행 임대에서 민간 분양으로 변경, 민간 주도의 개발과 기업 유치 지원('15)

- (제조업 차별 해소) 입주기업 선정 평가제도('14.7)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보완('14.12)하여 물류기업과 동등한 입주환경 조성

* 입주예정 37개 업체 중 50% 이상이 영업 개시할 경우 일자리 560여개 창출('15)

- (특화전략 마련) 항만과 배후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항만별 Biz모델** 개발

《 항만배후단지 현황 》

- (부산항) 동북아지역의 물류허브
- (광양항) 인근산업(화학·제철) 연계한 수출입 물류기지
- (인천항) 對중국·수도권 화물 물류 거점화



- (해외기업 유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센터를 운영('14.9~)하여, 타겟기업 접촉 등 해외마케팅 본격 전개

※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추진

- '14.3월 의원입법으로 법안 발의(서용교·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 '14.9월 관계 부처, 전문 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제도 도입 필요성 등 검토 중

→ 가급적 조기에 정부 입장 확정

* 「범 민관 T/F」를 중심으로 원활한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추진('14.下~)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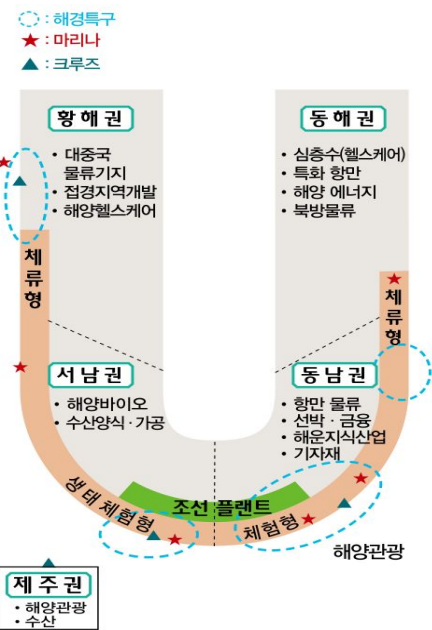
□ 국가 해양경제 육성 및 연안관리 마스터플랜 마련

- (배경)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해수부 소관의 제반 계획*은 상호간의 연계와 융합이 미흡한 실정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안정비계획,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등

- (개선 방향) 계획 간 위계를 정립하고, 관련 계획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기본 구상(예시) 》



- (종합전략) 연안(항만·어촌)과 배후 지역이 연계 발전하는 'U+1 형태의 해양 복합공간 개발 전략'을 마련, '臨海 지역을 국가·지역경제의 축'으로 디자인

* 예시) 항만은 배후 도시와 연계된 광역 해양경제 거점, 도서와 소형 항만·어항은 인접 지역의 관광·문화·교육 거점으로 육성

- (지역특화산업 육성) 심층수, 해양 헬스케어, 관광·레저, 수산가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칭사업 발굴

* 연안 지자체와의 공동 T/F에서 사업 발굴 후 예산 확보 등 본격 추진('16~)

- (해양관리 역량 확충)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연안, 灣, 갯벌 등을 지역의 대학·연구 기관이 조사하고, 자료 등을 전담 관리

* 필요 시 씨그라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추진

· 과학자료를 토대로 기후변화, 연안관리, 해양오염, 적조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안 마련

· 해당 지역의 조사·연구 실시, 자료 축적·활용, 전공자 취업 확대 등 해양수산 관련 지역 대학·연구기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추진체계·일정)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전략 마련('15)

다. 과감한 규제완화 등 수산업 투자환경 개선

① 기업활동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 완화

① 어촌 관광구역 내 어항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 개선

-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또는 지자체)로 귀속되는 규제를 폐지, 어촌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15.9, 어촌어항법령 개정)

* 어항 편익시설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 오락, 목욕 시설 등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어항 편익시설 설치 제한 완화

* 21개 시·군 10개 灣 3,230km²(서울시의 5.3배 - 육지 368, 해역 2,526, 내수면 336)

- 숙박·오락시설, 횃집을 제외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어촌 지역 투자·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 제고('14.12, 수산자원관리법령 개정)

* 「어촌어항법」 상 복지, 문화, 환경정비, 레저용 기반, 관광객 이용, 휴게, 주민편의 시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선박의 건조·수리 규제* 완화

* 낚시·레저 등 중소형 선박 수요가 증가 추세이나, 건조 능력이 있는 중소 조선업체(보호구역 내 소재)는 수주 등 사업 참여 불가

- 건조·수리가 가능한 어선의 규모를 24m 미만→40m 미만*으로 완화 하고, 대상은 어선→일반 선박으로 확대('14.12,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 40m 이상의 어선은 항해용레이더 설치 등 추가비용 상승으로 수요 미미

④ 양식장 신규면허 대상 확대로 민간투자 유망산업화

- 면허 대상(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을 어업회사법인과 업종별 조합으로 확대하여 규모화 촉진('14.12,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② 지역 맞춤형 어항 개발로 「즐거 찾는 어촌」 조성

* 5년간 신규일자리 창출 1,954개,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2조1,500억원

- 수산업 외 지역 특화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어항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14~'18, 10개소, 1,893억원)

* (국가) 어항, (지자체) 도로, 문화시설, (민간) 호텔, 레스토랑 등

《 대상항 및 유형별 개발 테마 》

- **복합형** : 어항기능 재배치, 노후시설 현대화, 관광 레저·친수시설
* 다대포(부산 사하), 저동(경북 울릉), 서망(전남 진도), 남당(충남 홍성), 옥지(경남 통영)
- **낚시관광형** : 낚시잔교·공원, 낚시어선 전용 계류시설, 인공어초 등
* 위도(전북 부안), 능포(경남 거제), 안도(제주 서귀포)
- **피서리나형** : 요트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등 레저 인프라 구축 등
* 위미(제주 서귀포), 물건(경남 남해)

-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콘텐츠가 조화된 아름다운 어항(~'18, 3개) 조성
- 방파제 안전시설, 안전난간 등 시설물 유지보수(120억원), 내진 성능 평가(10억원) 등을 통해 방문객의 안전한 이용 도모('15)

③ 민간 투자시장을 통한 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합작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태펀드 지속 출자*

* ('12) 80억원 → ('13) 75 → ('14) 100 → ('15) 100

- (우수기술 사업화) 담보·신용은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평가체제 구축·사업화 자금* 지원('15)

*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15. 40억원)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역특화 창업) 지역 맞춤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발굴 →제품 개발→판로 확보'까지 일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17년까지 100개 기업 지원 추진('15. 20억원)

가. 해상교통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① 해상교통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관리상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선사 영세성 및 사업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선박 노후화, 안전관리 소홀 및 투자 미흡, 선원 고령화·자질 저하 등

**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최적 대안 마련('14.9~12)

《 해외의 연안여객선 운영 사례 》

- (캐나다) 취약·적자항로에 대해 연방 또는 주정부(공사설립) 운영
- (스웨덴) '98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직접 운영, 현재 입찰제 운영
- (스코틀랜드) 정부·지자체에서 보조항로 지정, 선사에 보조금 지급
- (일본) 일부 항로의 경우 민간 외 지자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직접 운영

- 아울러, 여객운송사업 **진입장벽 철폐***, **요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우수사업자 진입 촉진 및 선사 대형화 도모**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송수요 기준은 폐지하고 사업자 자본금 기준 등 신설

②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간 항로 재개

* 제주 반입물량(공산품, 건축기자재)은 2~3일 체화, 10월부터는 농산물 반출물량 적체 예상

- (카페리 여객선) 인천-제주 항로 재투입은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연계된 해운법 개정 등 제도개선 이후 추진
- (RO-RO 화물선) 여객선 투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우선 **대체 투입**

《 투입 준비 RO-RO 선박 》

선 사	선 명	총톤수	건조일	투입	비 고
제양항공해운	KS헤르메스	5,901톤	'99.10	9월 중	연안카페리잔교
미래해운	미래 11호(가칭)	6,543톤	'14.8	10월 중	경인항 이용

나. 도서민의 생활 안정 지원

① 도서 지역 선박 기항시설 개선

- 낙후 도서 지역의 주민, 관광객과 생필품 수송용 선박의 안전한 정박과 승하선을 위한 **도서 지역 항만 인프라 정비**

* 연안여객선 이용객수는 증가 추세('13. 1,606만명)에 있어 인프라 개선 시급

- 기항지 현황조사(여객 수요, 시설 노후도 등)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필수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15)**

- 시설부족에 따른 운항 제한 등 **여객 불만 해소** 및 침체된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서 주민의 경제·교통환경을 쾌적하게 개선

* '14.上 연안여객선 운송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777만명→713)

② 해양영토 수호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 이용 패러다임 전환

* 유인도서 현황('84→'05) : 갯수(530→482개, △8.9%), 인구수(434천명→176, △59.4%)

- **(도서 관리)** 해양영토 수호, 기상 관측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도서 (서격렬비도 등)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강화**

* 예)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국가 편입 검토, 관측 시설물 등 설치 추진

- **(무인도서 이용)** 지형도를 제작·보급('14.下)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면적기준 규제를 **완화**(33→100m²)하여 **체험관광 등 이용 촉진('15)**

* 개발가능 지정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완료('14) → 개발 잠재성·접근성 있는 무인도의 선별 및 지원('15)

- **(복지·소득)** 낙도 지역 **어촌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추진('16. 기본계획 수립)

* 도서 특성을 감안한 관광·레저 콘텐츠 개발, 특산물 브랜드화, 생산·유통 기능 확대

다. 수산업 종사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유통환경 조성

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 (산지시장)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즉시 가공·상품화하여 대형 소비처 등으로 직송하는 시스템 구축
 - * '14.12월까지 2개소 완공(속초, 제주), 3개소 추가 착공(완도, 경주, 고성) 우선 추진
- (소비지) 전국 16개 도매시장의 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확대 및 시장 운영 개선 등 기능 활성화방안 마련('14.10)
 - 특히, 대도시의 노량진수산물시장('15.8), 부산공동어시장(예타 중)과 자갈치시장('17)은 문화·관광 기능을 겸비한 복합공간으로 재생

② 전통 수산물시장 활성화 도모

-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명절, 어한기, 재해) 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 요청 물량은 우선 배정·공급
- 지역 수산물 특화시장(7개소)*의 맛집과 우수 상가 등 홍보, 소비 촉진 이벤트와 판촉물 지원(중기청 협업) 강화
 - * 인천종합어시장, 마산어시장, 양동수산물시장, 안면도수산물시장, 다대씨파크, 자갈치시장, 속초종합수산물시장

③ 수산물 정부 비축 확대 및 가격 예보 실시

- '17년까지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호를 감안하여 비축 물량은 1차 가공 후 방출('14.9~)
 - * 총소비량(오징어 등 4개) 대비 비축물량 비율: ('12) 1% → ('13) 2 → ('14) 25 → ('15. 정부안) 3
-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대 설정('14.10) 및 생산·가격 예보* 추진('15.1~)
 - * 단계별 관리수준(평시·주의·경계·심각) 설정 및 매뉴얼에 따라 비축품 방출

3 경제 혁신 : 성장 모멘텀 창출

가. 해양관광 서비스산업 육성

① 한국형 마리나베이 조성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 약 1,800억원의 재정 투자로 민간투자 1,934억원, 관광수입 연 1,800억원 발생 예상
- (인프라) 거점 지역에 마리나항만 6개소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
 - *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 휴식과 피향을 위해 주요 어항을 '어촌驛'으로 지정·개발('15~'18, 민자 400억원)하고, **섬관광 루트 개발***과 계류시설 등 설치 지원
 - * 예)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999km(아일랜드·장보고·엑스포·영산강 로드)
- (규제 완화)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 마리나항만 내 주거시설 허용 및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추진('15.上)

②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 10년간 3만톤급 국적 크루즈선 10척 취항 시 약 9천명 고용, '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 시 직접 소비액 1.4조원, 부가가치 5조원(간접효과 포함)
- (입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국적선의 선상 카지노 허가 등 운항 관련 규제 완화 등(법사위 계류 중)
- (인프라) 부산북항,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등을 비롯하여 '20년까지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전용부두를 차질 없이 준공
 - * 인천(15만톤), 여수(15만), 제주(8만), 강정(15만 2), 부산(22만, 10만), 속초(3만)
- (산업 육성) 국제크루즈 회의 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한·중·일 공동 협력방안 모색('14~'16)

나. 기업활동 편의를 위한 손톱 및 가시 제거

① 해양공간 이용절차 간소화

-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사항은 일괄 협의하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보고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14.11)
- (해역이용협의) 재해복구사업과 파라솔 등 이동시설물의 설치협의 대상에서 제외(또는 절차 간소화)('14.11)

② 항만 이용 불편 해소

- ① 광양항 철재부두 부족 해소 및 배후단지 전력공급 시설 확대
 - 고철부두를 활용하여 초과물량은 우선 처리(취급품목 조정, 시설정비)하고, 유티 국유지를 철재부두의 배후부지로 활용토록 제공('15)
 - 대규모 제조기업을 위해 배후단지 전력공급 계획(22.9KVA→154) 변경 검토
- ② 울산항 민간부두 유류화물 처리기능 확대 및 민자 컨테이너부두와 유류탱크사업 활성화 지원
 -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시, 물동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변경('14.12)
 - 4번 선석을 우선 활용('14.9)하고, 추가 선석의 유류 취급을 허용
- ③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도로 정비
 - 배후단지 간 연결도로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15, 실시설계 완료), 공장 진입도로는 자동차부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14.下 착공)
- ④ 부산 지역 목재 야적장 부족 해소(부산항신항)
 - 항만배후단지 일부 활용('14.10) 및 3단계 개발 시 전용부두와 야적장 확보
- ⑤ 마산항 민자 부두 정상 개장 지원
 - 다목적 부두로 취급화물 변경, 비용 보전방식 등 실시협약 변경('15.1)
- ⑥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연료 하역부두 신설('15.上,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인천북항 유류 전용부두 신설('14.下, 항만기본계획 마련)

다. 창조경제 성공모델 실현

① 선박현대화 및 관련 기술개발로 안전기반 확충과 신시장 창출

- (여객선) 노후선 현대화와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사업* 지속 확대 및 선박신조 지원제도 도입(선박펀드 등) 검토·추진

* 선박 대체·신조 대출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15)

- (어선) 표준선형 개발*과 노후어선 대체건조('14~)** 및 전기 추진 기관 개발보급 등 노후기관 교체 지원 확대

* 8개 업종별 표준선형 개발, 시제선 건조, 시험조업 실증('13.6~'18.5, 50억원)

** '14년 5억원 신규 지원 중(이차보전, 금리 3%, 융자규모 335억원 상당)

- (레저선박) 슈퍼요트*, 엔진 등의 국산화와 국산 선박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중과기준 완화** 추진(협의 중)

* 슈퍼요트 제조 연구개발 : '15~'19년 간 총 210억원 국비 투입('15. 10억원)

** 현재 1억원 이상 레저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10.02%), 재산세(5%) 등 중과세

※ 선박 현대화와 함께 선박·기자재 인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영업력 제고, 해외 진출 등 사업 다각화 지원방안 마련('14.12)

* 국내 매출은 약 1조 5천억원('11)으로서 국내 인증시장의 17~19% 비중 추정

- (e-Nav.) 전자해도 기반의 항법시스템 표준화 등 핵심기술 개발* 및 기초 인프라(정보센터, LTE 해상무선통신망) 확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현재 예타 중으로 약 2,000억원 소요 전망

** '17년 까지 일자리 1,500개 창출 및 '25년까지 세계시장 20% 선점 기대

- (선박평형수) 현 국제기준(IMO 협약)보다 1천배 강화된 차세대 처리 기술(美 기준) 개발*로 세계 시장 점유율('13. 58%, 약 1조원 수주) 확대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R&D 투자('13.4~'18.3) : 정부 120억원, 민간 40억원

②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수산식품산업 규모(생산액) : ('13) 8.5 조원 → ('17) 10조원

- (新수산식품) 가구 구조와 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한 간편식품 개발·상품화로 신규 수요 창출(포장·가공기술, 상용화 모태펀드 지원)

- 기능성식품 개발(미역 후코이단 등) 및 부산물 재활용(식의약품 등) 지원

* 예시) 명태부산물로 천연조미료 원료 생산 후 항공 기내식 등 시범 납품(수협)

- (관련산업) 천일염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미용, 스낵 등), 젓갈의 고급화(저염 등) 등을 비롯한 간편외식 창업 지원

* 천일염 시장('13) : 1,290억원, 젓갈 시장('12) : 2,500억원

- (안전) 수산식품 인증제도 단일화(8종→1종, '15), 이력제·원산지 표시 확대 및 포장 의무표시제 도입('16)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주요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14. 38개소→'16. 60개소), 방사능 검사 강화 등

③ 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극지기술 선도

- 장보고기지에 대한 원활한 운영·보급과 하계 연구기간 확대 등을 위한 자체 활주로 건설 검토('15.上, 활주로·항공망 구축계획 수립)

* 뉴지 크라이스트처치-장보고기지 : 3,500km(항공기 : 4.5시간~7시간, 아라온호 : 10일)

-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15.2, 타당성 검토 기획연구 중)

* 12천톤급 제2쇄빙연구선 건조시 25년간 약 8천억원 과학기술적 편익 발생

④ 해양심층수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 기반 마련

- 관련 시설* 간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제고를 위한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연구센터, 수산자원조성시설, 에너지 이용시설, 스파·레저시설 등

- 이용 범위를 건강성 식품, 농수산물 생산, 화장품 등으로 확대하여 500억원 규모의 시장 창출 지원(식품공전 등 개정, 식약처 협업)

라. 해외진출 활성화

① 수산물 수출 30억불 조기 달성('17) 추진 * '13년 22억불

- (시장 개척) 중화권, 동남아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K-Seafood 프로젝트), 통합 브랜드와 스타상품 개발(김, 굴, 넙치, 전복, 해삼 등)
- 중국 현지 무역사무소('14. 상해, '15. 청도), 초저온 냉동창고('15. 청도)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앵커숍 운영(중국, 홍콩, 브라질, 체코, 폴란드 등)
- (생산) 수출유망 10대 품목*의 대량 양식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양식섬·간척지·내수면 등 수출특화 양식단지** 조성
 - * 넙치, 전복, 해조류, 해삼, 민물장어, 갯벌참굴, 참다랑어, 관상어, 새우, 능성어
 - ** <양식섬(∼'15)> 진도·옹진·양양·태안·군산·통영·제주, <양식단지> 간척지-서남해 10ha (∼'17), 해면-제주('14∼'16), 공모(3개소, '15∼'17), 내수면 : 충북('14∼'16), 공모(1개소, '15∼'17)
- (기업 지원) 생산·가공·수출을 일관하는 품목별 기업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15)
 -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산물 패키지 보험(검역, 클레임), 단체보험 등

② 항만건설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모델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의 참여를 독려
- 현지 전문 에이전트 활용 및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와 사업화 제고
 - * 산업은행과의 MOU('14.10) 및 ADB와의 연례 세미나 개최 추진
- 부두시설을 포함하여 항만재개발, 해양플랜트, 수리조선, 항로준설, 내륙수운 등 대상국 여건에 특화된 사업* 발굴
 - * 인도네시아(해양플랜트 수리사업과 연계), 미얀마(수리조선소 재개발), 적도 기니(수리조선), 캄보디아(곡물부두) 및 메콩강 유역 내륙수운 개발 등

- 사업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주지원 활동 강화 및 전담 관리체계(가칭 해외항만개발지원센터) 구축
- 항만 관련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확충(→ 관련 기업과 Biz 미팅 주선)
- * '14년 5개국(알제리, 우루과이, 캄보디아 등) 3회 총 30여명 초청 연수 실시

③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해운물류기업 진출 촉진

- 물류기업 중심의 민·관 협력 강화, Biz모델 개발('14.12) 등과 함께 북극 항로 전문인력 양성,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 한-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14.10), 북극해 국제 세미나('14.11) 등
- 한-러 항만개발협력 MOU 체결('14.1)을 계기로 극동 5대 항만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15.12)
- 북극 지역 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상운송사업* 진출 지원
- * 야말 프로젝트(가스, 플랜트 수송)에 국내 해운기업 진출 지원

④ 남태평양 국가와의 창조적 공생을 위한 협력 확대

- 해저광물, 해양생명·수산자원 확보 등 미래 자원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협력 다각화
- * 진출 현황 : 해저열수광상 개발 현지법인(KIOST), 국내 기업 조업(피지 국적선)
- 정책 보급, 기술 이전, 인력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 도서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프로젝트·ODA와 연계 추진('15~)
- 남태평양 '축' 해양과학기지 재건축 등 인프라 개선(~'19)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도서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확대

Ⅲ. 성과 점검·관리 방안

<1> 과제 이행실적 점검 (분기별)

<2> 과제 적절성 평가 등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반기별)

<3> 과제 달성도 평가 (연말)

⇒ 3단계 과정을 통해 과제를 지속 보완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① 과제 이행실적 점검

- 세부 실행과제별로 실천카드 작성 후 분기별로 실적 관리
 - 분기별 평가 결과와 전문가, 관련 업·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수시)하여 지속 보완

② 과제 적절성 평가 등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반기별로 과제의 적절성과 보완 필요성 검토하는 등 정책 여건에 맞추어 현행화

③ 과제 달성도 평가

- 부진 과제의 경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완하고, 완료 과제는 향후 관리방안 마련

IV. 과제별 추진 일정 (Action Plan)

1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14. 3/4		'14. 4/4			'15. 1/4			'15. 2/4			'15. 下
	8	9	10	11	12	1	2	3	4	5	6	7~
○유망 투자처 발굴 및 투자 확대 지원		기업투자 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대토론회 개최	주력산업 비즈니스 모델수립	투자 확대 지원						
○항만 재생·투자 확대												
- 부산북항		복합문화 시설 세부계획 제안 (부산시)	국제여객 부두 준공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국제여객 터미널 준공				복합문화 시설 건립 MOU 체결			
- 부산신항			유류중계 기지 추진방안 마련		수리조선 단지 입지 확정							
-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계획 협의 및 공청회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협의		실시계획 승인	사업 착공
- 고현항	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 결정				사업비 적정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 승인	실시계획 승인	사업 착공				
- 광양항 묘도		사업협상 개시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협의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 동해항							북방파제 착공					방파제안 및 동방파제 착공
- 안전투자			낙포부두 여타 시설 (대상사업 선정시)					부 산 항 신 항 토도제거 설계 착수				
○항만배후단지를 복합 물류비즈니스 밸리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사후관리 제도개선							
○수산 분야 규제 완화		어항시설 가속규제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확대(12월) 양식장 신규 면허대상 확대(12월)									
○맞춤형 어항 개발	다 기 능 어항 개발 대상 선정 (10개소)	다 기 능 어항 설계 발주	다 기 능 어항 개발 설계 착수	아름다운 어항 선정 (3개)		다 기 능 어항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아름다운 어항 설계 용역 발주		아름다운 어항 설계 착수		다 기 능 어항 개발 최 종 보고회	다기능어항 및 아 름다운 어항 설계 준공 관계기관 협의
○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투자촉진 가이드라인 개최		창업투자 촉진지원 세부추진 방안 마련	수출용 통합인증제 개발			거점별 창업지원 센터 공모			우수기술 사업자 지원 창업지원 센터 선정 및 운영	수산전문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투자촉진 기업설명회 개최 수출용 통합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② 국민 불편·불만 해소

	'14. 3/4		'14. 4/4			'15. 1/4			'15. 2/4			'15. 下
	8	9	10	11	12	1	2	3	4	5	6	7~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검토·추진	T/F 구성·운영					제도 도입방안 마련·확정						법령 개정
○인천↔제주 항로 개설	연구용역 추진											법령 개정
○도서 지역 선박 기항 시설 개선		도서 지역 선박 기항 시설 개선 추진방안 마련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현황 조사 착수				사업 대상지 선정
○도서 이용 패러다임 전환		무인도서현황도제각 및 정보 시스템 구축(~'14.12) 무인도서 개발가능도서 면적 기준 완화 추진(~'14.12)		도서관리 종합방안 수립		무인 도서법 개정 검토	무인 도서법 개정안 마련	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추진				국회제출('15.10)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보완 대책안 마련			유통환경 개선 추진환경 점검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과제 발굴	유통관련 법 제정 완료 유통 관련법 하위 규정 제정
○전통 수산시장 활성화	추석절 정부비축 수산물 전통시장 방출			전통시장 맛집 소개 등 '수산물 스토리 로드' 책자 발간		설명절 정부비축 수산물 전통시장 방출		수산물 특화시장 마케팅 지원 (중기청 협업)				
○정부 비축 확대 및 가격 예보 실시		추석절 수산물 거래 및 물가점검	'14년 수산물 정부비축 집중수매		성수기 대중성어 집중수매			'15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어한기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추석절 대비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③ 경제 혁신을 위한 모멘텀 창출

	'14. 3/4		'14. 4/4			'15. 1/4			'15. 2/4			'15. 下
	8	9	10	11	12	1	2	3	4	5	6	7~
○마리나 인프라 조성 및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거점형 마리나 항만 사업계획 공모사업 및 타당성 평가	국제보트 산업전 개최	거점형 마리나 항만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 착수	거점형 마리나 항만 사업계획 수립 및 2차 공모 추진	거점형 마리나 항만 사업계획 고시			2차 거점형 마리나 항만 사업계획 협약고시	마리나법 하위법령 개정			거점형 마리나항만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수
○크루즈산업 활성화					부산북항 국제 크루즈 부두준공							강정항 크루즈부두 및 터미널 완공
○해양공간 이용절차 간소화			공유수면법 개정안 규제심사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제출								공유수면법 개정완료
○항만 이용 불편 해소			평택 당진항 자동화 부두착공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준공

	'14. 3/4		'14. 4/4			'15. 1/4			'15. 2/4			'15. 下	
	8	9	10	11	12	1	2	3	4	5	6	7~	
○선박현대화													
- 여객선	T/F 구성·운영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법령 개정	
	연구용역 추진												
- 어선	노후어선 투자확충 구상안 마련	노후어선 안전투자 확충 민관 TF운영 및 어선정책 혁신 장단기 세부추진 방안 마련											
	업종별 표준선형 개발, 시제선 건조, 시험조업 실증 추진('13~'18)												
- 레저선박	취득세 감면 등 제도개선												슈퍼요트 개발 R&D 착수(~'19)
- 선박·가치제 인증산업 육성					추진방안 마련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수산물식품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가공단지 개조 건설 추진			FPC 2개소 외식양식 업종 추진			대중 것갈 명품 브랜드 드와 추진			푸드트럭 등 창업 유치 지원	소바·가공식품센터 1개소 착공 수산물가공단지 2개소 완공	
○극지기술 선도	제2차 선진 kickoff 회의 남극 탐보고 과학기지 활주로 건설 추진 계획 보고	항공 관제 전문가 간담회 제2차 선진 건설사업 추진방향 설정 위한 간담회	남극 활주로 및 항공방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정책연구 용역 착수	제2차 선진 건설사업 추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제2차 선진 건설사업 추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남극 활주로 및 항공방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남극 활주로 및 항공방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제2차 선진 건설사업 추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남극 활주로 및 항공방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해양심층수산업 육성			해양심 층수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협의			해양심 층수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수산물 수출 30억불 달성	수산물 수출 및 관측 (총·모스 크·LA)	초저온 냉동창고 준공 (창·모스 크·LA)	중국 수출 한정 (창·모스 크·LA)	스타상품 개발 최종평가	수출보험 지원계획 수립·운영	KSeafood 프로젝트 추진	수출선도 조직 선정·운영	앵커숍 운영계획 수립(예산)	앵커숍 설치·운영	중국 무역사 수출현황 점검	수출보험 지원 앵커숍 운영 박람회·관측 참가 스타상품 개발 점검		
		'15년 신규 양식단지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수출양식 단지 (양식업) 중간평가	'16년 신규 양식단지 공모		'16년 신규 양식단지 사업자 선정			수출양식 단지 (양식업) 사업평가	수출양식단지(양식업) 7개소 시범사업 종료		
○극동 러시아 진출 확대				한러물류 협력포럼 개최	물류기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한러물류 비즈니스 실무회의 및세미나				극 동 러 시 아 해운물류 시장진출 계획수립	제2차 한러 물류협력포럼 개최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추진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방안 마련			여수프로젝트 및 ODA와 연계 추진							
	KIOST 축센터 건물내부마감, 선박건입로 확장 등					축센터 시설구축 진행(KIOST '15년 출연금 확보 결과 반영)							

법령명	주요 일정
■ 내수 활성화 : 민간투자 촉진	
항만배후단지의 복합물류 비즈니스 밸리화	배후부지 개발에 민간 참여 허용 등 항만법 개정('14.下)
수산 분야 규제완화	어항시설 귀속규제 완화(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 '15.9), 수산 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확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14.12), 양식 신규면허 대상 확대(양식산업발전법 제정, '14.12)
■ 민생 안정 : 국민 불편·불안 해소	
해상교통 패러다임 개선	면허제도 등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15.下)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안 마련(~'15.3),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15.7), 국회제출('15.1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법사위 통과('14.7), 본회의 통과('14.12), 하위법령 마련('15.3)
■ 경제 혁신 : 성장 모멘텀 창출	
마리나 인프라 조성 및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마리나항만 내 주거시설 허용 등 마리나항만법 개정(법사위 제류 중, '14.下),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마리나항만법 개정('14.12, 국회 제출)
크루즈산업 활성화	국적선사 육성 등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12)
선박 현대화 기반 확충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15.下)